

방법으로서의 경계, 공동체에서 연대체로…

“커뮤니티와 시민교육” 발제문

두루소통연구소장 채희태

1. 序 : 에딕과 에딕에 대하여

3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입체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두 개의 눈을 통해 3차원 공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입체로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두 개의 귀로 소리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귀가 두 개인 덕분에 인간은 눈을 감고도 비행기가 어느 쪽에서 출발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입체로 인지한 사물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의 점이 된다. 그것이 소위 관점이다. 1차원 세상에서의 관점은 평등할 수 있으나 2차원부터는 관점과 관점 사이에 상호작용이 시작되며 그로 인해 의도와는 무관한 위계가 형성된다. 더구나 우리는 3차원에 시간이 결합한 4차원 세상에 살고 있다. 독일의 역사학자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은 『지나간 미래』에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관계를 통해 시간을 중심으로 근대성을 성찰하기도 했다(황정아, 2014: 127). 경험은 지나간 과거, 기대는 다가올 미래를 의미한다.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현재라는 시간은 변하지 않는 과거와,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미래의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

관점은 특정 대상이 형성한 경계의 벽에 맺힌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는 바로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이다. 눈으로 코끼리를 볼 수 없는 장님은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님은 각자가 손으로 만진 부분을 코끼리의 전체라고 인식한다. 장님을 비웃을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성을 이성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상상과 결합시켜 무수히 많은 사회 체계들을 양산해 왔고, 그렇게 형성된 사회 체계와 인간의 관계가 코끼리와 장님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관념론의 반대편에 있던 유물론에 변증법을 장착해 근대 자본주의를 진단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르크스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관념의 영역에 계급이라고 하는 굳건한 경계를 세웠을 뿐이다. 인간이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경계이자 질서인 정치, 문화, 교육 등과 그 하부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계급이라고 하는 경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관점의 대상을 특정 사회 체계, 그 중에서도 교육으로 좁혀보자. 코끼리와는 다르게 이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사회 체계들은 모두 경계의 밖과 더불어 확실한 안쪽 면을 가지고 있다. 코끼리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장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 체계인 교육이 경계 밖의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관념 체계를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에 구축한 것이 바로 학교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이 학교를 통해 일상적으로 자신의 경계 밖으로 보내는 관점들을

마주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교육의 관점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그저 물리적인 경계일 뿐, 교육의 경계가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 체계이론을 확립한 ‘루만(Niklas Luhmann)’은 경계 안쪽의 관점을 ‘자기서술’, 경계 바깥쪽의 관점을 ‘외부서술’이라고 표현했고, ‘키저링(Kieserling Andre)’은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서술 방식을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기능 분화의 결과(전상진·김무경, 2010: 242에서 재인용)라고 보았다. 또한 전상진과 김무경(libd.)은 자기서술의 중요한 쓰임새는 기능 체계의 정당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체계의 자기서술, 즉 교육의 성찰이론인 교육학에게 교육은 ‘모든’ 것이다. 교육은 오로지 교육의 관점에서, 경제는 오로지 시장의 관점, 정치는 오로지 정치의 관점에서 다른 체계들을 살핀다. 예컨대 정치 체계가 ‘민주시민의 소양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거나, 경제 체계가 ‘기업의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을 양산했다.’고 비난할 때 교육의 반응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육체계는 각 체계가 나름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다른 체계의 성과, 이 경우 교육적 성과를 수용하는 특성을 인정하기보다, 비교육적 기준으로 교육을 재단하는 시도들이라 비난한다(전상진·김무경, 2010: 242-243 요약).

복잡한 사회 체계를 인지함에 있어 코끼리 앞의 장님이 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내부서술과 외부서술을 쏟아내고 있는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기보다 경계의 안팎을 균형감 있게 살피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루만이 이야기한 내부서술과 외부서술의 관점을 인류학에서 출발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적용되고 있는 에믹(EMIC, 주체의 관점)과 에틱(etic, 관찰자의 관점)으로 치환해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해 한층 더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공동체)와 시민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도구화되는 공동체

대한민국에서 마을공동체를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시킨 사람은 故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 영향력이 그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아니면 뒤늦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전국의 지방 도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박주형(2013: 8)은 ‘서울시의 정책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각종 ‘마을공동체 운동’들의 흥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박주형의 의심은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태생적 획일성을 경계하고 있는 블랑쇼(Maurice Blanchot)나 낭시(Jean-Luc Nancy), 그리고 바타유(Georges Albert Maurice Victor Bataille)와도 맥을 같이 한다. 박주형(Ibid., 10)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새마을운동을 모두 권력의 ‘통치기술’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함으로

써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들을 문제시하고, 탈신비화하며, 재정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선이자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최근 대한민국에 떠돌고 있는 공동체는 시대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아왔다. 낭시는 블랑쇼(Maurice Blanchot)와 함께 쓴 『밖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동체’라는 말과 그 개념은, 우리가 알았었던 몰랐었던, 나치의 Volksgemeinschaft(국민공동체)라는 뒤틀린 밧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독일에서 사실 Gemeinschaft라는 말은 여전히 좌파 쪽에서 적의에 찬 반사 작용을 촉발했었다. 1988년 번역되어 나온 내 책은 베를린의 한 좌파 신문에서 나치의 것으로 다루어졌었다. 반면 1999년 구동독에서 창간된 베를린의 한 신문은 ‘공산주의의 회귀(Retour du communisme)’라는 제목 하에 같은 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 두 가지 일화는 ‘공동체’라는 말이 그 책과 함께 야기한 이중적 애매함과 모호함과 아마 아포리아를, 하지만 또한 - 꼭 강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 집요한 요청을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블랑쇼·낭시, 2005: 113-114).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어떨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는 서로 다른 세대와 성과 그 보다 거창한 이데올로기까지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가치의 문제로 대입해 혐오한다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공동체는 선택일까, 아니면 배제일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은 연대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배제의 공동체로 보인다. 지역의 아젠다를 통해 어렵게 공동체를 확장하고 나면, 거의 2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공동체는 정확히 두 동강이 난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과 0.73%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담길 수 있을까? 정치적 취향 외에 갈수록 복잡하게 분화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은 공동체를 더욱 세밀하게 해체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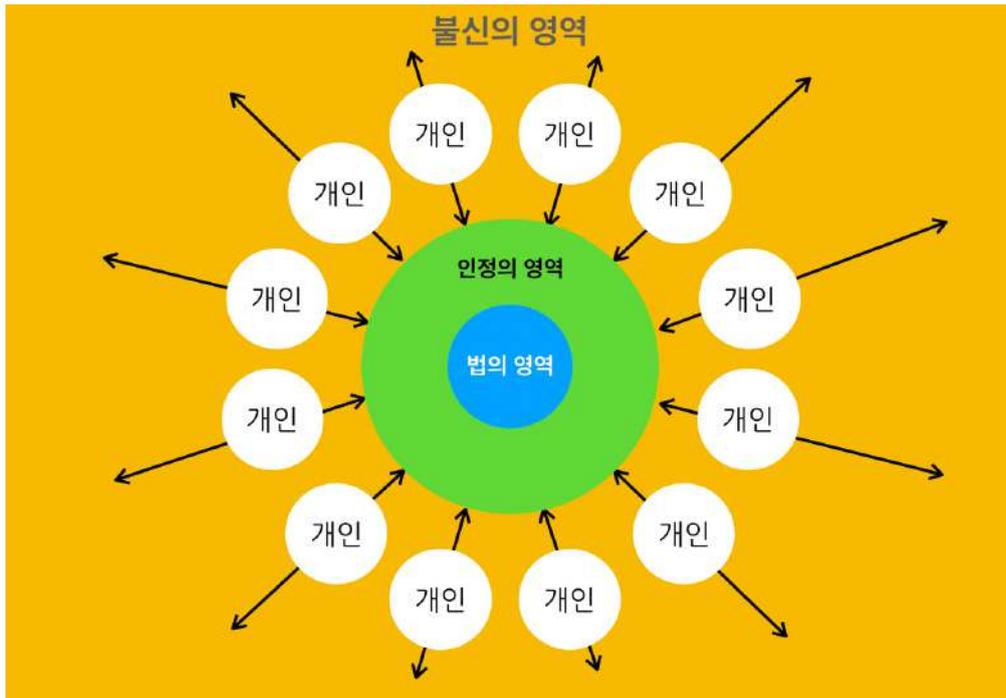
교육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을교육공동체와 보건과 복지를 주제로 형성되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는 모두 마을공동체의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필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하버마스에 이어 독일의 새로운 철학병기로 떠오르고 있는 루만의 말처럼 모든 전문성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한다(이철, 2015/12/23).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는 가족 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3. 근본적인 문제들

가. 시민의 성장이란?1)

1) 본 내용은 필자가 2020년, NGO연구 제15권 제1호에 발표한 논문, “범람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小考”의 마지막 제언 부분을 가져와 일부 수정했다.

모두가 상식을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상식이 다르고, 민과 관의 상식이 다르고, 마을과 학교의 상식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 그리고 상식을 주장하는 강도와 빈도를 통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인 상식이 이미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상식이 사라진 시대, 상식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략 두 가지다. 첫째, 더 이상 상식을 주장하지 않거나, 둘째, 상식을 포기한 채 모든 것을 “상식의 제도적 강제 장치”인 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림 1] 법과 인정,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불신의 영역

민과 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저 자신의 상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집단,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때 ‘짐이 곧 국가’라고 얘기했던 절대군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개인이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개인은 한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대략 오천만 명이 넘는다. 상식이라는 것이 사람 수만큼 존재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소위 상식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남아 있는 유일한 상식은 그나마 법뿐이다. 법의 영역을 인정이라는 영역이 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밖은 모두 나와 다른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영역이다. 불신의 영역은 밖으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인정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의 성장’이다. 쉬운 한글의 역설로 ‘시민’의 ‘성장’에 대한 개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과 ‘성장’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누가 시민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 필자 또한 학생들이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존엄한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시민일까, 아닐까? 공무원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엿한 시민이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시민인 것처럼,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시민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비슷하게 개념을 확장해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시민이고,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선발되기만을 바라는 시민인 것이다. 필자는 2022년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학부모교육 지원 방안 연구”에서 학부모를 현실에 대해서는 아이들보다 모르며, 미래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지만, 현재 교육에 관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로 정의한 바 있다.

다음은 필자가 생각하는 성장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다. 흔히 성장을 키(신장)로 생각한다면 키가 계속 크는 것을 성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키가 큰 사람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발할 때만 의미가 있다. 10명의 아이가 무거운 나무를 함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개인에 국한해서 보면 키가 크는 것이 성장일지도 모르겠지만, 집단인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나무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키의 차이(간극)를 줄이는 것을 성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시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회문제가 간극에서 비롯한 불공정, 불만족, 부정의, 불평등이라면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성장이다. 즉, 누군가 혼자 앞서나가 사회적 간극이 확대된다면, 앞서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장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시민’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결합해 ‘시민의 성장’은 시민의 다양성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것이고, 다양성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고, 다양성이 균형을 잡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시민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이견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근대의 시민은 투쟁의 과정에서 등장했지만, 근대를 벗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민은 이견과의 투쟁 보다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체인가, 이해당사자인가?

공동체와 시민교육 분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주체’이다. 주체라는 단어는 언젠가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버넌스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주체(主體)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몸의 주인이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몸은 오로지 자신의 몸밖에 없다. 요즘은 내 몸에서 나온 자식한테도 ‘일’해라, ‘절’해라 할 수 없는 시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주체라는 말에 그 어떠한 기대도, 집착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주체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체라는 말은 얽히고설킨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내 몸 하나 어쩌지 못하게 되자 생겨난 모종의 욕망 같은 것은 아닐까?

“이해당사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주체에 비하면 매우 낮은 단어다.

그래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10명이 힘을 합해 소를 한 마리 잡았다면, 그 소를 분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소를 잡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소를 잡기 전에 합의에 의해 분배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10명 중 소를 잡는 데는 참여했지만, 소의 분배 방식이나 권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주체는 모두일 수도 있고, 모두가 아닐 수도 있다. 모두가 소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체이지만,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소의 분배를 결정할 수 없으니 그 누구도 주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이든 합의든 소의 분배 방식이 결정될 때까지 10명은 모두 소(stake)를 잡(hold)고 있는 사람(er), 즉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존재한다.

그것이 신념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돈이든 우리는 모두 이해당사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체 파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공과 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대중들이 고민 없이 동의한 결과이다. 우리는 판사에게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공적 권한을 위임했지만, 판사 또한 자신의 사적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주체인 동시에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다. 마을이 아닌 신념의 공동체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집합의 정의는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집합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도 하나의 집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을공동체라는 집합을 이루는 조건은 ‘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일까, 아니면 지리적 조건을 공유하면서도 생각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신념의 조건’일까? 소위 마을공동체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보다는 ‘신념’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정치권이든, 행정가든 소위 우리나라의 네임드 중 최초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故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시장이 마을공동체를 앞세워 천하를 도모하려는 웅대한 뜻을 품은 유비라면, 박시장으로 인해 물을 만난 시민사회는 모두 관우고, 장비고, 조자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어 온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채 ‘시민’이 되지 못한 ‘국민’들은²⁾ 공동체가 주는 구질구질함보다 분리와 소비가 주는 안락함과 달콤함에 빠져 인간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 또한 빠르게 망각해 왔다. 박시장으로 인해 간디가 무려 1세기 전에 부르짖었던 마을공동체 바람이 뒤늦게 대한민국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그만큼 마을과 공동체라는 것이 인간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거나, 모든 것을 경제 개발에 쏟아 부었던 대한민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체의 파괴가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역시 대한민국답게 마을공동체가 반공동체적인 전문성으로 평화롭게 찢어발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시민’과 ‘국민’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는 송호근(2015)의 『나는 시민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을공동체는 플랫폼의 성격과 동시에 빅텐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이 빅텐트적 성격이라면, 그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무엇이든 품어야 하는 것은 플랫폼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빅텐트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어쩌면 누군가 마을공동체라는 큼지막한 텐트를 쳐 놓고 그 입구에서 성골과 진골을 가려 왔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마을공동체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마을공동체를 표방한 유사 브랜드가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그중 하나요, 복지와 의료가 만나 영어 간판으로 내 건 “커뮤니티 케어”가 또 다른 하나로 보인다.

4. 경계(境界)의 관점에서 바라본 존재의 이중성

가. 경계에 대하여

세상엔 많은 경계들이 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경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도 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경계라면 마음만 먹으면 넘거나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심리적 경계를 넘는 것은 물리적 경계를 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 발리바르(tienne Balibar)는 경계선의 “다의성”과 “이중성(heterogeneity)”에 대해 기술하면서, “다수성, 그것들의 가상적이고 허구적인 속성”이 “그것들을 조금도 덜 실재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기술하였다(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2021: 26).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물리적 경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인 국경일 것이다. 반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경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선과 악의 경계이다. 진화심리학자인 버스(David Buss)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거나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도록 태어났으며,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진화과정에 적응해야 했고, 선이나 악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에 선과 악이 공진화했다고 주장했다(정유정, 2016: 170/174).

물리적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지금은 둘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물리적 경계가 지난 5천 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상상하면 물리적 경계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심리적 경계인 선과 악은 아직까지도 모든 경계에 침투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스어로 선을 뜻하는 ‘아가톤(agathon)’이란 단어에는 도덕적 의미 외에도 ‘득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악(惡)’을 뜻하는 ‘카콘(kakon)’이란 단어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이 세계에는 부정이나 범죄 등 각종 악행이 만연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악’, 즉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2014: 24/132). 그래서 경계는 그것이 물리적 경계든 심리적 경계든 경계(境界, border) 밖의 존재나 생각을 경계(警戒, caution)하게 만든다. 그래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안은 선이고, 경계 밖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경향성을 갖는다.

나. 경계의 이중성

얼핏 보면 경계가 경계로 나뉘어진 둘(또는 그 이상)을 대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계로 나뉘어진 둘은 경계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이끌어 낸다. 선과 악의 공진화가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버스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경계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다. 선과 악을 경계에서 바라본 최초의 인물은 역시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누군가가 해(나쁜 것, to kakon)를 줄 수 있다면 그는 이로움(좋은 것, to agathon)도 줄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견해는 다음과 같은 추론에 따른 것이다. 좋은 것을 알면 이로움을 줄 수 있는데,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좋은 것을 알 수 없다(플라톤, 2009: 52).

이러한 경계의 관점은 사실 동양사상의 오랜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교 경전인 주역(周易)에 등장하는 태극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만,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하나의 태극을 이룰 수 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를 볼 수 있고, 밤이 있어야 낮의 소중함을 알 수 있으며, 겨울을 지나야 여름을 맞을 수 있다. 공자는 논어의 자로 편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 존이구동(存異求同), 즉 생각이 같지 않아도 화합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하였다.

다. 경계의 확장

개념을 분리(separate)해 인식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중 하나다. 자연과 한 덩어리로 존재했던 인간은 이성을 갖게 되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를 통해 자연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인간은 객관으로 존재하는 자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분류(categorize)를 시작한다. 인간은 자연을 생명의 유무를 기준으로 생물과 무생물로, 다시 생물을 운동성과 세포벽의 유무 차이를 기준으로 동물과 식물로, 그리고 그 각각을 다시 종-속-과-목-강-문-계-역으로 분류하며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해해 왔다.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분리 능력으로 이제 인간 스스로를 인종과 성, 나이 등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분리는 객관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와는 다른 개념으로, 차라리 분열(divisi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 물리적 경계인 강을 건너기도 하고 인간이 쳐 놓은 울타리를 넘기도 한다. 이성을 가지지 않은 동물도 심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직까지 심리적 경계는 동물적 본성이 아닌 이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성은 자연과 인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준이다. 동시에 이성은 인간 사회 안에서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경계를 횡단하는 이종교배의 패러다임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전지구화 과정은 오히려 경계의 감소가 아닌 확산을 낳았다(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2021: 105-106).

인간이 문명의 과정에서 확장해 온 다양한 심리적 경계를 모두 헤아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 사회 안에서 가장 세밀하게 물리적 경계를 나눈다면 그 끝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개인(individual)이 존재할 것이다. 개인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물리적 경계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무한에 가까운 심리적 경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인간의 심리적 경계는 어떤 기준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어 왔을까?

라. 경계의 기준

앞에서 인용한 진화심리학자 버스의 말처럼 심리적 경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준은 생존일 것이다. 생존이라는 가장 동물적인 본성은 이성에 의해 은폐되기도 하고, 또 그럴듯하게 포장되기도 한다. 농경시대의 공동체는 집단을 이루어 농사를 짓는 것이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에 형성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중심으로 문명을 개척해 온 인류에게 공동체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공동체는 과잉생산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과잉생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물리적 경계의 최소 단위가 개인인 것처럼, 소비도 그 최소 단위가 공동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 되어야 자본주의에 유리하다. 그래야 과잉생산의 맞은편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과소비와 중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과소비를 촉진하며, 유행은 중복 소비를 부추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은 미래까지도 소비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인간은 인간이 아닌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 집단, 즉 관계의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소비에 굶주린 개인으로 살아간다.

때때로 생존은 이성과 결합해 생존 그 자체를 초월하기도 한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인 신념도 종교와 다르지 않게 인간을 죽을 수는 있어도 물려설 수는 없는 매우 강한 존재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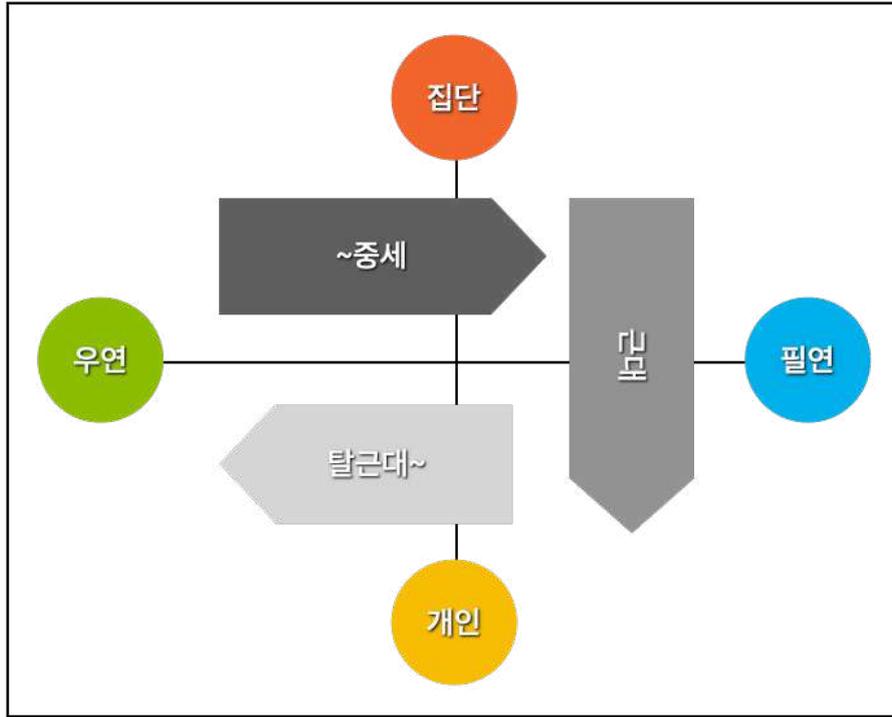


[그림 2]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제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필연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연의 결과일까? 신념은 오롯이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만들어 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처한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일까? 인간의 신념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30년 전 대학생들이 반독재·민주화를 외쳤던 이유는 그 시대에 총칼을 앞세워 국가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학생들은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고민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이 필연적 의지로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선택할 수 없다면 우연의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마. 경계의 이동

중세 이전까지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했다. 집단에 득이 되는 것이 선이고, 집단에 득이 되지 않은 것은 악이었다(경계의 첫 번째 기준: 집단).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지만, 인간을 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할 수준은 아니었다(경계의 두 번째 기준: 신이 관장한 우연). 11세기 초반에 등장한 부르주아지는 오랫동안 상업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이끌었다. 이후 과학혁명을 통해 이룩한 문명의 성취는 신이 아닌 인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경계의 세 번째 기준: 인간에 의한 필연). 과학문명을 통해 다양한 결핍에서 벗어나게 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집단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손해나 피해를 감수할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경계의 네 번째 기준: 개인).



[그림 3] 심리적 경계의 기준과 시대 변화에 따른 경계의 이동

14세기 발발한 흑사병이 중세의 질서를 흔들었듯, 21세기의 코로나는 과학문명을 통해 한껏 오만해진 인류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불확실성을 선물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대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것이다.

5. 小結 : 방법으로서의 경계, 공동체에서 연대체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착각과 적어도 소통은 하고 있다는 기대는 오히려 경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뿐이다. 사실 이러한 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관점이 단순히 1대 1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경계를 기준으로 그 안팎에서 또다시 다양한 관점의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 때 은평구청 어공으로 근무하면서 민과 관의 경계 사이에 끼어 있었던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어공으로 있으면서 교육 전문직과 교육 행정직이라는 매우 이질적인 경계를 경험하기도 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쩌다 공무원이 된 필자 또한 그 안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의 경계를 형성했었던 것 같다. 경계의 분화에 이해관계가 더해지면 경계의 안팎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국가 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거버넌스는 방법으로서 경계를 선택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국가 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다시 부도덕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정책 결

정 권한을 이양하자라는 것이 아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절, 시장의 실패는 이미 경험하였다. 자본주의가 직면한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국가정책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모두 필요하다. 시장의 전문성과 국가의 전문성을 특정한 입장이 아닌 경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한 ‘파스칼(Blaise Pascal, 2003: 101/831)’은 피레네 산맥이 편에서의 진리가 저 편에서는 오류가 될 수 있다며, 산맥이라는 경계 위에서 진리와 오류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살폈다.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지만, 서양의학은 몸을 나누어서 본다. 동양의 세계관은 얽힘과 연결이고, 서양의 세계관은 분리와 맞섬이다. 이철은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통합하여 맞섬 둘은 하나라는 ‘맞얽힘’의 세계관을 주장한다(이철, 2021: 316-318).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계의 기준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우연에서 필연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과거의 기준이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권력은 과거에 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과거의 기준에 익숙한 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 기준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의 왼쪽과 오른쪽이 투쟁을 통해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는 근대의 역사 발전 법칙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좌와 우의 경계는 세계를 폐허로 만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을 비켜간 68 혁명을 거치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근대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념의 경계가 힘을 잃자 더 많은 경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새로운 경계가 근대를 양분했던 이전의 경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경계의 하위 개념 썸으로 인식하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라는 것이다. 경계가 감당할 수 없이 범람하고 있다면 그 경계가 나누고 있는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 대신 경계 자체를 제3의 대안적 방법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선택한 그 입장이 무수히 많아진 경계로 인해 세상의 절반이 아닌 무한대에 수렴하는 분모 n분의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또한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체계들을 살피기보다 그 경계 위에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일까? MZ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그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경험하지 않아 보수화되었기 때문일까? ‘글루쿠만(Max Gluckman)’은 과학이란 우리 세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글루쿠만의 말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면 MZ세대는 30여 년 전의 기억에 발이 묶인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마흔이 넘어서야 겨우 만지기 시작한 스마트폰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용한다. 스마트하게 진화된 그들의 눈에 각자 다른 견해를 하나의 집단에 가두려고 하는 공동체가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굳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하는지 의심이 생긴다. 굳이 밝히자면, 과거 나의 소원이 통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소원은 통일보다는 평화인 것 같다. 모든 이견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고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연대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박주형(2013).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1), 4-43.
- 이 철(2015). “끊임없이 확장하는 소통의 의미장... 루만의 ‘교육소통’이란?”. 『교수신문』 (12/23).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930>>
- 이 철(2021). 『맞업힘』. 서울: 움직이는책.
- 전상진·김무경(2010). “사회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사회와이론』 17, 229-255.
- 정유정(2016). 『종의 기원』. 은행나무.
- 채희태(2020). “범람하는 거버넌스에 관한 小考”. 『NGO연구』, 15(1), 1~42
- 황정아(2014). “지나간 미래와 오지 않은 과거 - 코젤렉과 개념사 연구 방법론”.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13, 113-136.
- 기시미 이치로 · 고가 후미타케(岸見一郎 · 古賀史健)(2014). 『미움받을 용기』. 전경아 역. 서울: 인플루엔셜.
- 모리스 블랑쇼·장-뤽 랑시(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역. 문학과 지성사.
- 산드로 메자드라 · 브렛 닐슨(Sandro Mezzadra · Brett Nielson)(2021). 『방법으로서의 경계』. 남청수 역. 서울: 갈무리.
- 파스칼(2003). 『팡세』. 이환 역. 파주: 민음사.
- 플라톤(2009). 『크리톤』. 이기백 역. 서울: 이제이북스.